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2020. 1. 31.



행정안전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안

'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사업내용과 발주제도 등을 주관기관 및 IT기업과 공유하여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함

□ 개 요

-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13:00~17:30
- 장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 대상 :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 IT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계획 발표 및 사업관리 안내
- 2020년 추진사업(총 18개, 장기계속계약 1개 제외) 주요내용* 설명
* 각 주관기관별 10분 내외로 사업내용, 발주시기, 특이사항 등 발표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3:30	30'	- 참석자 등록	
13:30~13:35	5'	- 인사말씀	행정안전부
13:35~13:45	10'	- '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13:45~14:05	20'	- 전자정부지원사업 절차, 발주제도 등 안내 * 사업관리 절차 및 관리방안, 수발주제도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14:05~14:10	5'	- 장내정리	
14:10~17:10	180'	- '20년 사업별 주요내용 설명 * 공통인프라(3)·차세대전환(6)·최신Trend적용(7)·사회문제(3)	주관기관 담당자
17:10~17:30	20'	-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 당일 사정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변동 가능

참고 1 사업설명회 세부 일정계획

시 간	소요 시간	주 요 내 용	비고
13:00~13:30	30분	▪ 참석자 등록 및 행사 안내	
13:30~13:35	5분	▪ 인사말씀	행안부
13:35~13:45	10분	▪ '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계획	행안부
13:45~14:05	20분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안내 * 사업관리 절차 및 관리방안, 수발주제도 등	NIA
14:05~14:10	5분	▪ 장내정리	
14:10~17:10		▪ '20년 사업별 주요내용 설명 (18개 사업)	
14:10~14:20	180분 (각 10분)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주관기관
14:20~14:30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14:30~14:40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14:40~14:50		국가 기준정보 관리체계 3차 구축	
14:50~15:00		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15:00~15:10		디지털 고지·수납 통합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ISP	
15:10~15:20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15:20~15:30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2차 구축	
15:30~15:40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15:40~15:50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5:50~16:00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16:00~16:10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구축	
16:10~16:20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ISP	
16:20~16:30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16:30~16:40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16:40~16:50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16:50~17:00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2차)	
17:00~17:10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BRR/ISP	
17:10~17:30	20분	▪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NIA

※ 당일 사정에 따라 발표 순서 변동 가능하며 주관기관 미참석 시 NIA사업 담당자 발표 예정

참고 2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목록

□ 총 사업규모 : 1,076억원(19개 과제) *관리비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예산	사업기간
계			107,640	
사업추진	총 19개 과제(계속 13개 78,462백, 신규 6개 26,578백)		105,040	
공통 인프라 조성	소계(3개)		16,586	
	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3차 구축	행안부/경찰청	7,532	'17~'22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3차 구축	행안부	5,496	'18~'20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행안부	3,558	'19~'21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소계(6개)		37,925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행안부	7,169	'20~'22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ISP	권익위	847	'20~'22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외교부	8,047	'18~'20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행안부	5,709	'18~'20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국토부	6,131	'19~'22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구축	국토부	10,022	'20~'22
최신 Trend 적용	소계(7개)		37,214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조달청	5,765	'18~'20
	디지털 고지·수납 통합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ISP	행안부	658	'20~'22
	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행안부	4,873	'20~'22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대검찰청	9,370	'20~'22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병무청	1,404	'19~'20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2차)	행안부	10,346	'18~'21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행안부	4,798	'20~'22
사회문제 해결지원	소계(3개)		13,315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권익위	4,578	'18~'20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BRR/ISP	국토부	808	'20~'23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2차 구축	환경부	7,929	'19~'21
기반조성	지원사업 심의 및 사업관리		2,600	

* 사업설명회에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장기계속계약)은 발표 제외

1

'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계획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filling the majority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filling the majority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filling the majority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filling the majority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2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안내



행정안전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INDEX

I. 주요 수발주 제도 안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 기타 제도 변경 사항

II.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절차 안내

- 지원사업 사업관리 프로세스
-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 발주형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하도급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Contents 1

주요 수발주 제도 안내


주요 수발주 제도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투입인력 관리 금지
국정원보안성검토절차 이행
H/W, S/W 견적가격 중
적정가격산정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기능 점수 방식의 개발사업
대상은 투입인력 관리 금지
(투입인력 방식의 ISP사업은
투입인력 관리 종전과
동일하게 가능)




분리발주

나라장터
쇼핑몰(S/M) 구매
SW분리발주 중 품질성능
평가(BMT)
위임발주



하도급 제도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및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



감리, 장기계속계약

정보시스템 감리 및
장기계속계약 제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19.8.23 개정)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요사항

- 제42조(인력관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18.3)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사업
 3.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정사항('19.8)

제4조의3(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제9조(예산및사업대가산정), 제16조(제안요청서 요청)
※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 내용

-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개정)
 -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기존 최저가격)
 - 대상 : H/W, S/W (조달쇼핑몰 제품 제외)
- 제안요청서 요청 (신설)
 -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
 - 대상 : 통합발주 되는 H/W, S/W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19.8.23 개정)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개정 내용(계속)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개정)
 -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 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목적) 정보화사업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
 - (구성) 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행정안전부 주관)



6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18.8.22 개정)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요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의 SW 개발사업 투입인력 관리금지
 -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의 투입인력(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 관련 요구 금지
- ※ 기능점수(FP)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이 혼용된 경우 기능점수 부분만 투입인력 요구금지
 -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의 투입인력 관리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 ※ (투입공수 방식 산정 사업) 컨설팅[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SW 운영사업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

7



기타 제도 변경 사항(SW 기술자 평균임금 등)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대가산정 개정사항

- SW기술자평균임금및 대가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

개정사항

- SW기술자평균임금제도 변경(SW산업협회)
 - IT직무별 (IT 기획자 등 28개) 평균임금 제도로 변경('19.12.1), 월평균근무일수는 20.9일 적용(전년대비 0.1일 증가)
 - (구) 등급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적용 시 평균임금 7.7% 증가 (단, '20년까지는 기존 등급별 평균임금 적용가능)

제안요청사항강화

- 제안서상 사업관리자(PM)의 실제 사업수행 확보 방안 (전자정부제도혁신팀)

제안요청서 반영 사항

-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인력관리
 - 사업관리자(PM)의 소속을 주 사업자의 근로자로 제한 및 사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직접 발표
 - 발주기관 요청 없이는 계약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 교체 불가
 - * 단 사업관리자(PM)의 개인 사유로 교체 시 동급 이상 경력과 역량 보유자로 교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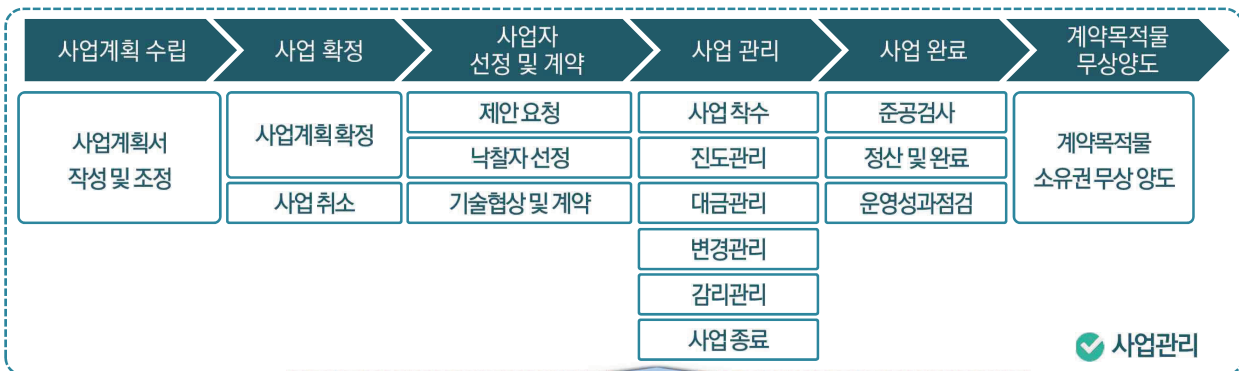


■ Contents 2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절차 안내



지원사업 사업관리 프로세스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20년 1월 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20년 2월 예정) 참고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절차 흐름도



① 사업계획서 접수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NIA에 공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분리발주 제외검토서, 대기업참여제한 검토서(해당시) 등 포함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 NIA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기관에서는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 NIA는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사업범위 등을 검토조정

③ 사업계획 확정

- 주관기관은 사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NIA에 제출
- NIA는 행정안전부에 사업 확정을 요청, 행정안전부는 최종 사업계획 검토 후 NIA와 주관기관에 확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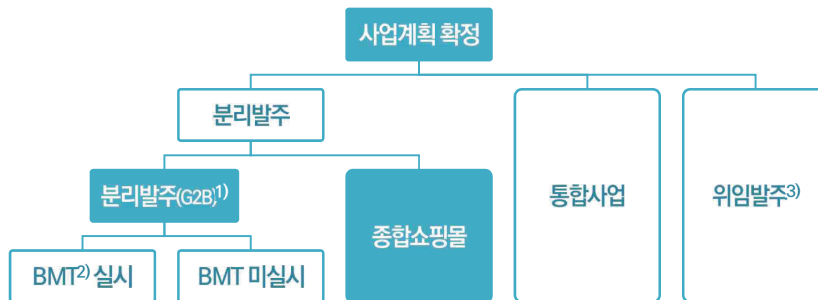


11



발주형태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 분리발주(G2B): 분리발주 SW 중 5천만원 이상, 종합쇼핑몰 미등록 SW는 별도의 발주를 통해 진행
* 'SW분리발주제외사유검토기준(조달청)'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분리발주 제외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HW는 분리발주를 통해 구매 진행
- 시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평가결과 활용여부, BMT 일정, 평가방식, 시험비용 등 결정
*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경우 시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BMT 제외
- 위임발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이체되지 않은 도입 자원의 수요를 받아 통합영역 설치, 공동활용 측면에서 통합 설계하여 발주 및 구축을 대행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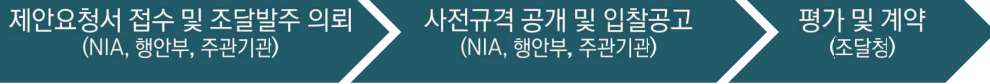
1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절차 흐름도



① 제안요청서 접수 및 조달발주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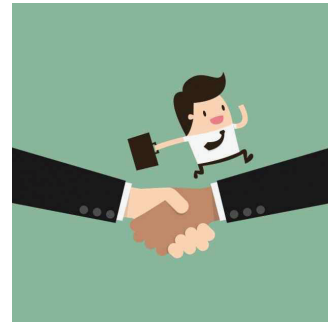
- 사업확정 이후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NIA에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에는 긴급입찰 사유서(필요시), 분리발주제외검토서, SW사업영향평가검토결과서 등 포함
- NIA는 제안요청서 검토 후 나라장터에 발주 의뢰
 -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TTA와의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추진

②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 조달청은 10일간 사전규격공개, 40일간 입찰공고 진행(긴급시 사전규격공개 3일, 입찰공고 10일로 추진)
- * 긴급입찰사유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③ 평가 및 계약

- 조달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10억 이하 사업은 온라인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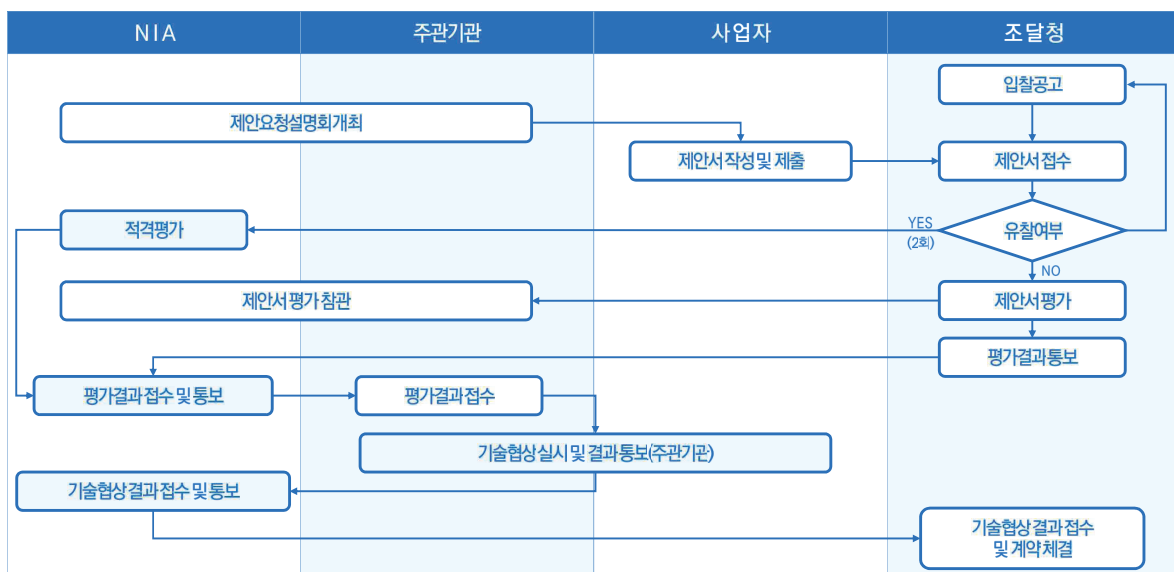


13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14



하도급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202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 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 하도급 금지 예외 사유

-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 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 하도급 가능 사유

- 단순 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 참고



15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전자정부

Q & A

감사합니다 !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No.	기관	과제명	페이지
1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19
2	행안부/조달청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2차)	23
3	행안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2차)	26
4	행안부/경찰청	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3차 구축(지문정보 포함)	29
5	행안부	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32
6	행안부	디지털 고지·수납 통합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ISP	35
7	행안부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38
8	환경부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2차 구축	40
9	권익위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43
10	외교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47
11	행안부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50
12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구축	52
13	권익위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ISP	56
14	대검찰청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62
15	병무청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67
16	행안부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71
17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2차)	74
18	국토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BRR/ISP	78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자치단체 분산구조에 따른 구조적 한계, 건축행정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한계로 국민의 불편 지속, 다양한 분야의 건축정보 활용 증대로 수요자 중심 정보관리체계 전환 필요 등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
- 총 사업기간 : '19년 ~ '22년 (4년)
- '20년 사업기간 : 7개월 ※ 발주예정시기 : 2월
- 예산('20년) : 6,131백만원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국민, 건축사사무소, 전국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 서비스 내용
 - (대국민)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민원 업무를 전국 통합시스템 통해 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민원 접수 신청
 - (공무원) 건축인허가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내외부 협의기관과의 신속한 의사소통 및 체계적인 대량정보 관리, 건축 관계자의 행정 처분, 자격면허 확인 등 전국 단위 조회 서비스로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
 - (유관기관) 건축인허가 협의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접속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단위 민원조회 처리가 가능하여 업무 효율화, 건축물대장 단위, 건축물 단위의 정보활용 및 인허가 이력추적 정보관리로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성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 별 분산 운영구조에 따른 전산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애와 운영 비효율 개선이 필요
- 자치단체 별 건물도면 정보의 분산관리에 따른 전국단위 도면 정보 연계체계 부재로 국가 재난·재해 시 즉각 대응체계 미흡
- 다양한 주택정책 수립에 건축물 용도, 규모 등 통계분석의 기초 자료 요구 및 활용 증대
- 시스템 기반기술 노후화로 국가정책지원 효율화 및 업무개선에 한계와 ActiveX 기술 교체 불가능
-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즉시 활용하여 수요자의 정보 활용 증대요구에 부응하는 정보관리체계로의 확장 필요

□ 사업 내용

< 1차 사업내용 >

- 포털 및 사업자민원 통합·재구축, 건물ID 및 추적관리체계 시범구축,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아키텍처 구축 등

* 사업 착수('19.7월) → 분석·설계('19.11월) → 구현·테스트('20.3월) → 서비스 오픈('20.5월)

- 건축인허가 민원 서비스 재구축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33종 민원에 대한 신청·처리 업무
 - 필증발급 허용, 민원진행 관리, 기안문 관리 등 민원처리 공통 업무
 - 인허가대장, 도로대장 등 대장정보의 생성 및 정정
 - 동층호 정보입력, 인허가 도면 비교 검토 등 도면관리 및 검토
- 건축심의 민원 서비스 재구축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 5종 민원 신청·처리 업무
 - 심의접수, 심의회의, 사전검토, 자문비, 심의대장 등 심의관리 업무
 - 심의현황조회(안전유형별, 연차별, 처리유형별), 심의위원현황 등 관리

- 건축물대장 민원 서비스 재구축
 - 건축물대장 생성, 이기/전환/합병신청, 말소 등 13종 민원 신청 업무
 -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표제부), 집합건축물(전유부) 대장 생성 관리
 -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전유부 분할·합병, 표시사항변경 등 변경 관리
 - 공무원의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조회(자구 및 타구)
- 건축물대장 및 필증 발급 서비스 재구축
 - 건축물대장과 인허가 필증을 별도의 ActiveX 설치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재구축
 - 발급문서는 모바일 기반 진본여부 확인 기능 제공
 - 현행 세움터 운영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발급 서비스 구축
- 모바일 서비스 재구축
 - 나의민원, 민원명, 민원요약, 협업민원 등 민원 관련 현황조회
 - 건축물 현황 및 건축물 정보의 지도기반 조회
 - 설계공모 현황, 공모내용, 공모결과 조회
- 통합DB 설계 및 구축
 - 1차 사업에서 구축한 통합DB 설계표준을 기반으로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물대장 업무에 대한 통합DB 설계 구축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물대장 정보의 DB 이관방안 마련
 - 건축심의 민원 서비스 오픈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건축심의 DB, 첨부문서 등 자료를 통합DB 구축

□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 Non Active-X, 대용량 처리기반 서버 운영, 속도저하 방지 등에 따른 대국민 사용 편의성 향상
- 정부 클라우드 센터 활용에 따른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실시간 통계 등 이력 데이터 추출 및 전국단위의 자료 검색 용이
- 유연한 자원할당으로 인한 장애 방지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최적화된 인프라 구성에 따른 최신 기술 활용 및 법·제도 등 기술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정보자원 표준화 및 라이선스 통합 관리 등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 (정량적 기대효과)
- 전국 자치단체 인프라 개선비용 절감(1회 492억)
- 전국자료 추출 및 통계작업 시간 절감(5년간 86억)
- 콜센터 인건비 절감(5년간 23.7억)
- Non-ActiveX 기반에 따른 민원인 시간 절감(5년간 13.75억)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5,829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해당 없음
	하드웨어 구매	해당 없음
	소 계	5,829
감리비		302
합 계		6,131

기타 고려사항

- 선행사업의 아키텍처 및 설계·개발 표준 준용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박경주서기관(044-205-2409, pinkykj@korea.kr)

조달청 물품관리과 이해정사무관(070-4056-7175, chejudd@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민들이 지도기반으로 편리하게 전국의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자원공유 시스템 고도화
- 총 사업기간 : '18년 ~ '20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7~8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5,765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조달청 물품관리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국민 및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700여개 기관 업무담당자
- 서비스 내용
 - (국민) 각급 기관별 공공자원(시설·물품·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기반의 검색·예약·결제 등 자원공유 서비스 제공
 - (업무처리담당자) 기관별 공공자원 등록 관리, 공공자원 이용시간, 이용료 등 공유서비스 제공 관리, 공유서비스 및 기관보유 공동활용 물품 등록, 관리를 위한 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1차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원공유서비스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만 구축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 고도화 필요
 - 공유서비스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기반, AI챗봇시스템 도입 등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사업 내용

○ 대국민 통합 공유포털 확대 구축

- 공유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공유자원 관리의 효율화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
- 공공자원 검색예약 기능, 자원관리 기능, 통계분석 기능, 고객센터 기능 등 포털 기능 확대 개발 및 포털 검색 기능 고도화
- 대국민 통합 공유 포털을 통해 수집·생산된 데이터를 토대로 정형 통계(표, 그래프) 및 리포트 생성을 지원하는 시각적 통계분석 기능 개발
- 공유서비스 앱 기능, 키오스크 기능, 카카오톡 알림 연동 기능, 음성인식-텍스트 변환(STT, Speech to Text) 기능 개발
- 기관 간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무상양여, 무상관리전환, 결제 연계, 공동활용 협의 기능 등 개발, 기관별 공유자원 홈페이지 제공

○ 빅데이터, 챗봇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해안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추진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주제(후보과제) 도출
- 선정과제별 데이터 확보 방안 및 분석 결과 활용 방안 수립
- 빅데이터 처리·저장·분석·활용 분석모델 설계, 분석모델 검증 및 시각화 방안 수립
- 선정과제별 빅데이터 시범 분석, 시사점 도출
-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을 통한 실시간 문의 대응
- 맞춤형 서비스 기능 구현
- 자격정보, 서비스 이용이력정보 기반 맞춤형서비스 기능 개발
- 검색 기반 맞춤형서비스 안내 기능, 추천 및 연관 서비스 기능 개발
- 서비스 신청 상태 및 이력정보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이용자들의 이용 내용 및 이용 후기 분석
- 세대별, 지역별, 공유서비스별 맞춤형서비스 추가 발굴

- 민간플랫폼 협업·연계체계 구축
 - 민간 공유서비스 및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확대 추진
 - 모두의 주차장 등 민간 공유서비스 연계 기능 설계
 - 네이버 예약 서비스 등 민간 포털과의 검색, 연계 구현
 - 공유서비스 Open API 생성 및 제공 기능 설계
- 내·외부 통합 연계체계 구축
 - 지자체의 공공자원 예약서비스 및 해외 공유자원(중기부) 서비스 연계확대
 - 국립대학 공실관 연계 확대, 기타 이용자 서비스 정보 연계(병원·약국 정보 등)

□ 기대효과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의 확대 구축으로 범정부 통합 공유 플랫폼 기반 마련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수혜 확대
 - 공유서비스 확대 및 위치기반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마련, 챗봇시스템 구축 등
- 각종 장비 등 다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물품의 기관간 공동 활용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로 물품활용 최적화 및 예산 절감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등	4,950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OS 등	386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155
	소 계		
감리		274	
합 계		5,765	

□ 기타 고려사항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조달청 통합과제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행정안전부 주민과 유은희 사무관(044-205-3161, euny1004@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시스템의 개선과 정보화 환경의 전환 필요
- 총 사업기간 : '18년 ~ '23년 (실 사업기간* 4년)
* 주민 통합행정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과 2차 구축 사업간의 차이 기간 제외
- '20년 사업기간 : 약 9개월 ※ 발주예정시기 : 3월 또는 4월 초
- 예산('20년) : 5,709백만원 ※ 지방비 3,173백만원 별도(총 사업비 8,882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읍·면·동 주민민원 창구 방문 구술·서면 민원신청인 등
 - 주민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인감·서명 업무담당자 약 8,000여명 등
- 서비스 내용
 - (국민) 터치 패널(스크린)으로 전입신고, 등초본 열람출력 등 전자서식 민원신청, 모니터를 통해 구술·서면으로 신청한 민원내용 확인
 - (업무담당자) 주민·인감·서명 등 업무 정보·지식의 공유 및 활용, 실제 업무환경과 동일한 훈련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행정역량 향상
 - (시스템) 보안 및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 보안성, 안정성, 안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창구의 서면 민원신청 시 입력항목 다수 및 복잡성
 - 민원창구 방문 민원인은 다수가 정보 취약계층인 점 대비 서면신청 시 입력 항목 다수 및 불필요한 입력 정보 등 존재
 - 수기 신청서 보관에 따른 문제점 및 구술신청 내용확인 작업의 비효율성

- 구술 및 서면 신청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시 담당자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로 인해 직권처리 하거나 행정처리 재작업 발생
-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및 학습기반 부족
 - 주민등록 업무 경력이 짧은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공동학습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 사용이 불편하고 도움이되는 콘텐츠의 부재로 실질적인 활용은 미흡함
 - 문서나 교육자료만으로는 실제 업무처리 내용 습득에 한계 존재
- 운영환경의 용량 부족 및 재해복구시스템 불일치
 - 가용성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주민등록시스템 WEB, WAS,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 용량 증설 및 추가도입 필요
 -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훈련시스템 포함)으로 신규 장비 및 시스템 SW 도입
 - 주민등록 운영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간 불일치로 장애·재난 발생 시 서비스 전환 및 안정성 확보 불가

□ 사업 내용

- 정보인프라 도입 및 구축
 - 지식활용 플랫폼(모의훈련시스템 포함) 구축
 - 통합행정, 정보제공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재구성
 - 통합행정 및 정보제공 운영환경 보강*
 -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시스템 SW 라이선스 등 증설 및 추가
 - 정보제공 재해복구시스템 보강 : 정보제공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일치
- 응용시스템 신규 개발 및 재구축
 - 터치 패널(스크린)을 활용한 전자서식·안내사항 구현
 - 주민·인감·서명 업무 정보 및 등록, 공유 및 활용 기능 설계·구축. 훈련시스템 기능 구현
 - 데이터 제공 요청, 전화 문의·상담, 개인정보조회이력관리 등 서비스 관리체계 기능 구현

□ 기대효과

- '21년부터 매년 약 88.52억원의 경제적 효과
 - 행정처리 오류 및 직권조치 등 재작업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약 59.08억원
 - 지식 검색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한 자료검색참조 소요비용 절감 : 약 29.44억원
-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편리성 제고
 - 구술·서면신청을 전자화하여 입력항목, 대기시간, 의사소통 오류 최소화
- 주민등록 민원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담당자 행정 역량 강화
 - 주민행정 지식 및 사례 검색 등을 업무에 활용하여 민원 대응시간 최소화·서비스 정확성 향상
 - 주민행정 지식활용 플랫폼 및 훈련시스템 활용으로 업무담당 기간, 경험 등 개인적인 차이 최소화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등		2,618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1,337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1,754
	소 계		3,091
감리비			125
합 계			5,709

□ 기타 고려사항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과 일부 기간 병행 추진
 - * 사업기간 : '19.10월~ '20.10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신동화 사무관(044-205-2727, shindh03@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빈번히 활용되는 기준정보를 관리기관 중심의 체계적·고품질 관리, 데이터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향상
- 총 사업기간 : '17년 ~ '22년 (5년)
- '20년 사업기간 : 8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2월
- 예산('20년) : 7,532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국가기준정보 관리기관, 이용기관, 일반국민
- 서비스 내용
 - (범정부 기준정보 제공)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기준정보에 대해 관리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 (고품질 데이터관리) 관리모델(기준, 프로세스 등), 표준체계, 품질 관리 도구 등 고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제공
 - (기준정보 단일배포 기반) 관리기관의 데이터 연계 대행, 이용기관에게 표준화된 데이터 이용환경 제공
 - (신원확인 체계 표준화) 지문이용 본인인증을 범부처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마련하여 신속·정확한 신원확인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불편 가중) 복잡한 협의절차, 제공기반 미흡 등 행정기관간 데이터 제공의 한계로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거나 별도 취득

※ 주요 법정민원서식(378종) 중 국가기준데이터 후보(14종) 포함 비율 96%(‘17.8, ISP)

- (행정신뢰도 저하) 多기관 업무에 일관되게 참조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기관 간 불일치, 표준부재 등으로 인한 행정오류 발생

- ◆ 사학연금관리공단 '09.8~'14.9월까지 사망·실종자 등에게 983억원의 연금 지급('14.7 감사원 감사결과 KBS보도)
- ◆ 국세청 '00년~'15년까지 사망자 1,940명에게 세금 812억원 부과('15.1 감사원 감사결과 KBS보도)
- ◆ 살충제 사용계란 생산농가가 적시에 파악되지 않아 계란 출하중지 및 폐기 등 자연문제 발생('17. 8. 언론보도)
- ◆ 군인연금 '13~'18년까지 5년간 사망자 등에게 34억원 지급('18.11. KBS뉴스)

- (데이터 기반 서비스 한계) 기관별/정보시스템별로 개별 데이터를 수집·관리함에 따라 다부처 협업 및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한계 노출
- (신원확인 오류 증가) 경찰지문자료를 연계하여 신원확인하는 공공기관이 증가하면서 오류자료 등의 이유로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민원 증가

□ 사업 내용

- 국가기준정보 3종(토지, 건축물, 사업장) MDM 구축
 - 원천DB에서 속성항목 추출, 품질정제, 저장소에 적재 등 종별 초기데이터 구축
 - 변동데이터 연계수집, 상시 품질점검 자동화, 이력관리 등 운영관리 적용
 - 제공데이터 SET 구성, 이용기관 API 개발 등
- 국가기준정보 공통관리 기능 개발
 - 품질분석관리, 이력관리, 관리기능 등 공통기능 개발
- 국가기준정보 종별 확대에 따른 인프라 보강

- 기준정보 및 품질관리 인프라 및 연계 인프라 보강
- '21년 국가기준정보 3종(시설물, 의약품, 주소) 데이터 분석 및 모델설계
 - 기준정보 라이프사이클 분석, 데이터 현황분석, 품질관리 현황 분석 등
 - 데이터 모델, 운영모델, 관리모델 수립
- 신원확인 표준체계 구축
 - 타기관 정보시스템의 신원확인 요청시 지문특징점 매칭을 통해 일치율 점수 제공
- 지문자료 스캔입력 전자화 DB구축 및 자료정비
 - 약 5천만장의 종이신청서 중 일부를 스캔입력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DB자료 구축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로 인한 행정처리 비용 감소
- 민원서식 간소화 등 편의성 확대에 따른 민원인 비용 절감
- 국가기준정보 공동활용으로 기관별 관리비용 등 절감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DB 구축비 등	5,746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DBMS, CDC 등	1,348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토리지 등	438
	소 계		1,786
합 계		7,532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조윤희 사무관(044-205-2749, jyh1021@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민원상담을 신청·처리할 수 있는 범정부 단일 챗봇 채널을 제공하고,
 - 각 부처별 유사 기능 중복 개발·관리 없이 안정적·효과적인 챗봇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챗봇 개발용 공통 기반을 구축
- 총 사업기간 : '20년~'22년(3년)
- '20년 사업기간 : 7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4,873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국민) 챗봇 표준화를 통한 챗봇간 연계로 질의를 다른 챗봇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은 하나의 챗봇 채널만 이용하여 공통 기반과 연계된 모든 챗봇 질의 처리가능
 - (중앙부처) 공무원은 챗봇 구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코딩 없이 챗봇을 간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공분야의 다수 기관들이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기관 업무시간 외까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였거나 구축을 계획 중

- (문제점)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유사한 기능(챗봇 엔진)의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
- (문제점)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챗봇을 컨택 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챗봇을 챗봇 공통 기반과 연계하는 것이 복잡해짐

□ 사업 내용

○ 서비스 기능 구축

- 챗봇 상담 서비스 : PC 웹기반 상담서비스, 반응형 웹 기반 모바일 상담서비스
- 이용기관 제공 서비스 : 플랫폼 API 서비스, 기관담당자 챗봇 구현 지원 서비스

○ 플랫폼 기능 구축

- 대화형 플랫폼 : 인공지능 기반 대화, STT(Speech-to-Text, 음성→문자 변환)
- 챗봇학습 플랫폼 : 지능형 분석, 민원상담 지식 지능형 검색, 리포트/데이터셋맵, 지식 공유용개방형 API, API조회/활용, API 운영관리

○ 관리기능 구축

- 대화형 민원상담 DB 관리 : 지능형 지식 메타 DB 관리, 지능형 민원 소통 지식표준 관리, 대화형 민원상담 지식표준 관리
- 플랫폼관리 : 운영관리, 사용자 관리, 사용자/조직 이용현황, 연계관리, 포탈컨텐츠

○ 민원상담 365 포털(가칭) 구축 : 공통기반과 연계된 모든 챗봇에 동시에 질의할 수 있는 정부통합 챗봇채널

※ 반응형 웹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고, 타 사이트에서도 일반 배너/플로팅 배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설계

* 플로팅 배너(floating banner) : 웹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따라 움직이는 배너

○ 개별 챗봇과 공통기반 연계 기능 개발

- (신규 챗봇 구현)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신규 챗봇 구현
- (기 구축된 챗봇 연계) 민원상담 365를 통하여 들어온 질의를 연계된 챗봇에 전달하고, 연계된 챗봇이 생성한 답변을 민원상담 365가 받아 이용자에게 표출
- (기 구축된 챗봇 통합) 구축된 챗봇의 지식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챗봇 공통기반(민원상담 365)의 지식베이스를 재구축

□ 기대효과

- (대국민 접근성 제고)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 발생
- (서비스 개발·운영 용이성) 표준 및 가이드 제공으로 개별기관의 구축·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 (예산절감 효과) 적은 비용으로 개별기관의 챗봇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등의 이슈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균등발전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DB 구축비 등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소 계	
감리비		207
합 계		4,873

□ 기타 고려사항 : 해당없음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박은영 사무관(044-205-2768, eypark45@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민이 각종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공공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구축(21년)
- 총 사업기간 : '20년 ~ '22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5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2월
- 예산('20년) : 658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국민 및 정부, 공공기관 고지·수납 업무 담당자
- 서비스 내용
 - (국민)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알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 (업무처리담당자)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업무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수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은 우편고지를 우선하여 사용자 불편 및 예산낭비 초래
 - * 과다한 비용(일반우편 330원/건, 인쇄비 별도)에 비해 주소오류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등기우편 반송율 20% 이상),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거나 반송
 - *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 : 국세 1.1, 지방세 19.5, 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 등
- 전자고지를 받더라도 고지 주체에 따라 온라인 납부 창구가 서로 상이하여 사용자 불편 및 개별 수납서비스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발생

□ 사업 내용

-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현황분석) 정부·공공기관 전체 고지(안내, 처분 등)·수납 종류, 담당 기관, 방식, 관련시스템 및 관계법령, 제약사항 등 상세 현황 분석
 - (개선방안)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구축방안, 디지털고지·수납 적용 대상기관 및 단계별 확대방안, 민간플랫폼 연계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방안, 우편고지 축소에 따른 이해 당사자 관리방안 등
 - (이행계획)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등 추진체계, 연도별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정량·정성)
- 다수 부처 공동 활용 가능한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구축
 - 부처 간 공동 활용 가능한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마련
 -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을 한 곳에서 수령하여 누락·지연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확산



□ 기대효과

- 고지업무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종이 고지서 인쇄, 우편비용 등 직접적 비용 절감
 - ※ 지방세·세외수입 19.5천만건의 969억원 비용절감(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인력 효율성 제고, 공과금 방문 납부 시(60%)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242
	업무재설계(BPR) 수립비	345
감리비		71
합 계		658

□ 기타 고려사항

- 종이·우편 고지·수납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관리 방안
 -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 도입에 따른(우편고지 축소) 이해당사자 관리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방안 강구, 격차해소방안 등
- 민간의 참여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 민간 모바일 결제 플랫폼에 공공 디지털 고지에 대한 Open API 개방으로 중계자 역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공미경 사무관(042-481-1773, mggong@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정부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기록관리 효율성과 연속성 확보, 표준전자문서 외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기록 보존검증변환활용 등을 위한 기반 시스템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 총 사업기간 : '18년 ~ '22년 (5년)
- '20년 사업기간 : 7~7.5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7,169백만원
- 주관기관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록관리 담당자
- 서비스 내용
 - (중앙부처) 기록물의 물리적인 이동 없는 기록물 이관으로 기록물 관리 시간 단축, 행정력 절감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환경 제공
 - (지자체)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영구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기록물 생산·보존용 저장소 개별 구축·운영으로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 중복 투자, 기록물 이관 시 물리적인 이동으로 시스템 부하, 속도 저하 발생, 육안 검수 등으로 행정 비효율 발생
- 지자체별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개발·구축 시 예산 중복 투자, 영구 기록물관리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한 영구기록물 활용이 어려움
- 중앙영구기록물관리 기반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저하 및 장애 증가

사업 내용

-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RMS 통합
 - 기록물 생산 시점부터 보존까지 단일 스토리지 이용 환경 구축, 시스템 부하, 성능 저하 없는 최적의 물리적 저장소 통합 체계 마련
 - 스토리지 공유로 물리적인 이동 없는 기록물 이관, 건 단위 재이관 등 기록물 생산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 간 이관 기능 개편
- 표준 영구기록관리시스템(AMS) 기능 개발
 - 전자문서 외 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고려, 영구기록물 보존·활용 등을 위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 분석·설계
 - 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확장성을 고려, 기록물 인수, 보존포맷, 기준관리 기능 등을 모듈로 구현
-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반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개별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IaaS), 시스템 간 스토리지 자원 공유 체계 구축

기대효과

- 기록물 생산과 보존용 저장소 통합으로 기록물 중복 제거, 물리적인 이동 없는 기록물 이관으로 전자기록물 관리 효율성 제고
- 중앙·지방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 중복투자 방지, 영구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 이관 시 상호 운용성 향상
-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반 시스템 자원 운영관리 효율성 증대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3,088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663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3,137
	소 계		3,800
감리비		281	
합 계		7,169	

기타 고려사항

- 향후 클라우드 전환 등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복잡한 폐기물 신고행정 절차 간소화 및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방지와 안전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지능형 감시체계 구축
- 총 사업기간 : '19년 ~ '21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7개월 ※ 발주예정시기 : 2월~3월(변동 가능)
- 예산('20년) : 7,929백만원
- 주관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사업장폐기물 40만 개소(운반차량 6만대, 처리업체 8천개소)
- 서비스 내용
 - (국민) 범부처 폐기물 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신고, 사용자 식별·인증체계 간소화
 - (주관 및 운영기관) AI, IoT기반 지능형 자동화에 따른 폐기물 불법행위 방지, 현장 행정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사업장폐기물 관련 인수인계정보 위·변조 및 이동경로 등의 추적 방안 부재와 행정관청의 폐기물 인·허가사항 현행화 미진 등에 따라서 폐기물 관련 불법배출·처리·소각·매립 등 반복적 사건·사고 발생으로 사정기관(국무조정실, 국회, 감사원, 검찰청 등)의 강력한 시정요구

- 폐기물처리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하고 있어 인수·인계 당사자간 불법행위 확인 애로, 신고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민원 증대, 현장 지도·점검 인력(지자체) 부족과 전문 지원체계 부재

□ 사업 내용

- 처리업체 원격계량정보수집시스템 확산 구축
 - 폐기물 처리업체에 원격수집단말기 및 CCTV 설치
 - 딥러닝·객체 재인식을 이용한 차량번호인식
 - 엣지 컴퓨팅 기반의 원격수집단말기 고도화: 차번인식 및 폐기물 영상분석 등 반입량 감시 기능 포함
- 지능형 폐기물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구축
 - 폐기물 보관량 추정 분석: 인허가·현장정보 융합 분석
 - 거래자 관계 분석: 거래자 빈도·방향·중심성 분석
 - 불법 의심 배출·운반·처리자 이상 거래 탐지 모델 개발
- 지능형 폐기물정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의심거래탐지에 기반한 선별관제 및 자동 경보체계 전환
 - 지능형 폐기물 중앙관제를 위한 관제실 및 상황판
-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이상거래·다빈도 경보 업체 조사 대상 후보 선정·확정
 - 태블릿을 활용한 실태조사 현장정보 촬영 및 등록
 - 현장조사 결과 사후 처리: 행정처분 대상 업체 지자체 통보
 - 수탁처리능력, 적합성 검토 분석
- 폐기물 안전정보 대국민 신고 및 민간 연계 서비스
 - 불법 의심 폐기물에 대한 국민, 운반자 신고 서비스
 - 수탁처리능력 확인·적합성 확인 신청 및 발급 서비스
 - 배출자 연계 표준 API 개발
 - 처리자 원격수집단말기 연계 표준 API 개발

기대효과

- 폐기물 현장처리 정보수집을 통한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 위변조 방지, 이동경로 파악, 업체 반입량 파악 및 처리정보 공유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원천 차단
- 폐기물 인허가·신고 편의성 향상 및 유관정보 공유
 - 인계 자동신고, 보이는 ARS 등 폐기물 신고절차의 복잡성 해소와 편의성 향상 및 폐기물 관련 유관정보 연계·공유
- 폐기물 안전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력 강화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결과에 대한 업체·지역·기간별 주요 분석정보 산출 등 전문 분석체계 기반을 마련
- **Big Data, 영상, 융합·분석, 엣지 컴퓨팅 신기술 확산 기반 마련**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5,075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DB접근제어, 전자서식SW	219
	하드웨어 구매	연계서버, DB서버 등	2,321
	소 계		2,541
감리비		314	
합 계		7,929	

기타 고려사항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지능형 반부패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반부패 신고·정책·제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능형 청렴포털 서비스
- 총 사업기간 : '17년 ~ '20년 (4년)
- '20년 사업기간 : 9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2월
- 예산('20년) : 4,578백만원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청렴포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 중앙행정기관 등 1,500여개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 서비스 내용
 - (국민·전문가) 반부패 관련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신고하고 보호 및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식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권익위) 다양한 반부패 지능형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업무별 맞춤형 지식 서비스 학습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부패의 예방 및 제도개선 등 반부패 정보의 공개·공유 기반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반부패 업무는 위원회 중심의 부패·공익 등 5개 신고분야 신고처리 및 이행관리와 청렴도·시책평가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으며,

- 행정·공공기관 간의 반부패 업무처리 환경에 대한 시스템 연계·공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반부패 업무처리 및 이행관리를 위한 범정부 청렴정보시스템 구축 중

□ 사업 내용

- 대국민 지능형 청렴포털
 - 위원회,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 중 공개한 다양한 반부패 공개 선택한 자료에 대한 청렴포털 연계, 공개 서비스
 - 국민이 반부패 관련 전문지식 없이도 손쉽게 반부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관 분석, 연관 검색어 추천 등 맞춤형 검색 확대
 - 각 분야 전문가 등 수요에 따라 반부패 관련 통계, 검색어 등에 대한 트렌드 등 분석·활용을 위해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지능형 위원회 반부패 관련 업무처리 서비스
 - 상담, 신고, 보상, 보호, 부패영향평가 등 연관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분석기반 맞춤형 업무 확대
 - 위원회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반부패 업무 시 활용가능한 반부패 정보 분석 업무환경 구축
 - 사전 예측 중심의 개인·신고자 정보 보안 및 모니터링 기능 마련
- 지능형 공공기관 반부패 관련 업무처리 서비스
 - 신고, 보상, 부패영향평가 등 연관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분석기반 맞춤형 업무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반부패 업무 관리자, 담당자에 대한 이슈 알림 기능 마련
 -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업무에 활용가능한 반부패 정보분석 업무환경 구축
 - 사전 예측 중심의 개인·신고자 정보 보안 및 모니터링 기능 마련

- 지식기반 분류 및 맞춤형 사례 서비스 구축
 - 빅데이터 분석모델 지원을 위한 분류
 - 지능형 맞춤형 사례 구축 : 2,000건(신고사례 1,000건, 적발사례 1,000건)
 - 지능형 분석을 위한 키워드 구축, 지능형 분석을 위한 반부패 사전구축
 - 맞춤형 분석 서비스 방안 마련
- 지능형 반부패 정보 분석 및 분석 활용체계 구축
 - 반부패 업무별 분류, 기관정보 간 반부패 이슈 도출을 위한 분석, 연계 체계 구축
 - 반부패정보 사례별 전처리 및 맞춤형 분석 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한 유형별 분석모델 구축
 - 유형별 분석모델 지능형 맞춤형 분석 서비스 구축
- 통합 공통연계 기반구축
 - 반부패 통합연계 공유서비스 구축, 해안자료 연계 구축
- 분석기반 인프라 및 보안체계 구축
 - H/W, S/W 등 구매

□ 기대효과

- 범정부적 반부패 데이터 분석으로 빈발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 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
- 신고 사건에 대한 지식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고 처리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여 부패 사건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에 기여
-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보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의 적실성 제고
- 쉽고 편리하게 신고, 상담, 반부패 정보 검색 등 서비스 이용으로 국민, 전문가 등의 반부패 연구, 참여 활성화 등 민·관 반부패 협력 체계 강화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DB 구축비 등	3,398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711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248
	소 계		959
감리비		221	
합 계		4,578	

□ 기타 고려사항

- 반부패 업무는 다양한 법체계 및 정책업무로 구성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인식도,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반부패교육, 부패공직자 관리, 실태조사 등
--

- 부패신고 업무 관련 자료로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여 분석자료로 넘기는 자료(Text, HWP, DOC, PDF 등)에 비실명처리 하여 원만한 활용이 되도록 지원

- 분석모델 수립

다양한 반부패 정보에 따른 (선 관련 전문가)분석모델 설계 후 구축
분석모델 공통, 상담, 부패신고, 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위반, 복지보조금위반신고, 공공재정 환수, 유형별신고 종합, 청렴도측정, 인식도 측정, 반부패 취약(분야·업무·기관), 반부패 이슈 도출, 비식별 및 검증 방안

- 서비스 대상의 다양성

대국민	위원회	공공기관
- 신고인 - 피신고인 - 전문가 - 일반국민 - 사업자 - 외국인	- 5개 신고분야 - 6개 정책분야 - 일반 반부패 업무직원 - 반부패 분석업무 직원 - 권익위 일반 직원	- 1,500여개 기관 - 다양한 부서 담당자 - 일반사용자 - 전문 분석업무 사용자 - 인터넷망 사용 기관 - 행정망 사용 기관

- 분석 인프라 대전센터(혜안) 사용

- 빅데이터 분석에서 혜안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됨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우리국민의 해외진출 지속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사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
 - 해외에 위치한 재외공관과 국내에 위치한 행정기관의 전자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신속한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시스템 및 온라인 민원 포털 구축
- 총 사업기간 : '18년 ~ '20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8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3~4월
- 예산('20년) : 8,047백만원
- 주관기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해외에 체류하거나 또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
 - 180여 재외공관 주재 영사
- 서비스 내용
 - (재외국민 민원) 재외공관 방문이 불편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재외공관 방문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통해 편의 제공
 -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시행 등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관리 및 재외국민 긴급구난비 처리 등 재외국민 보호 업무 강화
 - (재외공관 영사업무 담당자)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 대상 영사민원 업무 효율성 제고
 - (국내 행정기관 공무원) 외교부 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강화를 통한 국내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의 재외국민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수차례 재외공관 방문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불편함 초래
- 실물(종이문서) 기반의 재외국민 민원문서 처리로 국내 관계기관과의 행정 업무 처리 효율 저하

□ 사업 내용

※ 사업 심의 과정을 통해 설치 대상 재외공관 숫자 등 상황에 따라 사업 범위 일부 변경 가능

- 재외국민 민원포털 개선
 - (모바일 민원 처리 알림 서비스 도입) e-Mail 로 전달되어지던 재외공관 민원 업무 처리 현황 알림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알림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서비스 확대) 온라인 발급 문서의 전자증명서 연계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 (재외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 생애주기별 꾸러미 서비스 설계 등 재외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
- 영사민원 통합업무포털 개선
 - (재외공관 공증문서 사본확인 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에 연계되던 공증문서 사본 확인 서비스를 학적서류, 부동산 서류 등 사본 확인 서비스에 대한 연계 확대
 - (민원문서 전자화 센터 구축) 재외공관 보관 종이 민원 서류를 전자화 하여 보관하기 위한 전자문서보관 시스템 구축 및 장비 도입
 -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기능 강화) 영사조력법 신규 제정에 따라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긴급구난비 지원 등 재외국민 지원 시스템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 시행을 위한 기능 구현
- 관계기관 연계 확대 및 재외공관 민원사무 인프라 확대
 - (재외국민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확대) G4K 2단계 구축사업에 구축된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계기관 활용 위해 행정정보 연계 확대
 - (재외국민 긴급구난비 등 영사조력법 신설에 따른 관계기관 연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
 - (재외공관 인프라 확대) 120개 재외공관 대상 민원문서 관리 서버 및 민원창구 대상 민원사무처리기 도입

□ 기대효과

- 인터넷으로 민원 사전신청, 방문예약, 진행상태 확인으로 재외국민의 방문 최소화 및 민원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 개별 문서 단위 수작업 민원처리 체계를 관계기관과 연계된 정보 시스템으로 유통하여 체계적인 민원처리 환경 마련
- 민원서류 전자적 처리에 따른 문서생산량 감소 및 업무 처리시간 단축, 해외 민원 서류 번역 서비스를 통한 부담 감소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DB 구축비 등	3,002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2,437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2,341
	소 계		4,778
감리비		267	
합 계		8,047	

□ 기타 고려사항

- 해당 시스템은 저속 네트워크인 외교정보전용망에서 구동 하여야 함
- 서버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한 재외공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국제 배송 비용, 전력 사정을 고려한 전자기기 납품 등 해외에서의 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임란희 사무관(044-205-2748, lrhkorea@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민 모두가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개개인에 맞추어 알려 주고 필요한 서비스는 어디서나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총 사업기간 : '20년 ~ '22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9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4,798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대국민
- 서비스 내용
 - 다양한 채널(SMS, 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기적·선제적으로 정부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납부 등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대화형·완결형 서비스 제공
 - 정부포털(정부24 등)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검색·추천하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별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검색하고 국민 스스로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발생
 - * 국민은 정부24, 국세청,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등 30여 개(전체 이용량의 90%),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8,000여 개 서비스 활용 중
- 정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용 방법을 모르는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 이용에 격차 발생
- 기관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고, 모든 정부 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데 한계 존재

□ 사업 내용

- (공통 플랫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능화(선제적 추천, 맞춤형 검색 등)하는 범정부 공통 플랫폼 구축
 -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수혜(or 의무 사항) 조건을 분석하여 적기에 선제적으로 정부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화 서비스 기반 마련
- (서비스 채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채널(메신저 등) 등과 연계 가능한 확장형 인터페이스 구축
- (서비스 연계)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건강정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비서를 통한 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 * 30대 공공기관(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계 확대('21~)

□ 기대효과

- 국민 개인별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디지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행정서비스 접속창구(단일화면) 통합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이용률 극대화 및 완결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편의성 향상
- 기관별로 진행되던 맞춤형/선제적 알림, 지능형 검색 시스템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DB 구축비 등	2,020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1,570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1,000
	소 계		2,570
감리비		208	
합 계		4,798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가공간정보의 수집~유통에 관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개편하여, 수요자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총 사업기간 : '20년 ~ '22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7개월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10,022백만원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자와 내용

-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NS센터라 함)가 연계·수집·관리·제공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체계적으로 관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 (정부기관 등) 과거 개별사업으로 구축하여 노후화된 공간정보 행정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개편하여 행정망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이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공간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플랫폼 제공

* 중앙부처 2,200명, 광역·기초 지자체 14,600명, 공공기관 780명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과 광주로 물리적 위치가 분산된 전산자원과 시스템별 상이한 상용SW 사용에 따라 데이터 연계 및 호환성 문제 발생

- 공간정보 분야 상용SW 현황

구분	전산자원 위치	DB	GIS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광주관리원	Altibase(국산)	IntraMAP(국산)
국토정보시스템	대전관리원	Oracle(외산)	ArcGIS(외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대전관리원	Oracle(외산)	-
공간정보Dream	광주관리원	Oracle(외산) Tibero(국산) PostgreSQL(오픈소스)	ArcGIS(외산) GeoServer(오픈소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공간정보Dream 시스템별 서로 다른 좌표체계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발생

구분	좌표체계	타원체	비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TM	GRS80	EPSG:2097
공간정보Dream	UTM-K	GRS80	EPSG:5179

- 데이터 이중관리, 유지보수 비용 상승 등 공간정보 융·복합 데이터 구축과 제공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
 - 동일한 데이터가 이중구조로 분산관리 되고 있어 최신성, 호환성 확보 곤란으로 데이터 융·복합 및 활용체계의 비효율성 초래
- 시도·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원천DB와는 별도로 NS센터가 부동산정보 활용을 위해 DB를 이중 관리
 - 월평균 33백만 건의 변동자료 처리를 수행하고 있어 정보 간 갱신에 따른 시점차이, 누락·검증 등 많은 어려움 발생
-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표준 데이터(부동산정보) 및 공간정보의 경우 지번의 분할·합병 등에 의해 실시간 변경되는 정보는 반영이 불가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재구축 또는 가공하는 시점 차이로 인한 품질 저하 발생

- 현행 주요 공간정보 기반 분석 및 정책지원 기능은 여러 시스템에서 연계를 통해 수급되고 있어 데이터 호환성 문제가 발생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공간정보Dream 개별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시각화, 공간분석 기능, 정책지원, 통계 등이 중복으로 서비스되고 있음
- 개인정보 유·무에 따라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이원화된 연계·제공 서비스 운영으로 복잡성과 유지보수비 증가
- 공간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자료연계모듈은 EAI기술 요소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요소를 결합하여 구축한 솔루션이나, 기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영에 한계

□ '20년 사업 내용

- 공간정보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서비스 체계 'DaaS' 구축

☞ 공간정보 DaaS란? 별도의 부가작업(좌표변환, 공간데이터 융합가공 등) 없이도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및 관리체계를 말함

- (데이터 통합 구축)물리적으로 분산(대전 및 광주 정보자원관리원)되어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로 정비하여 광주관리원의 G-클라우드에 통합 구축
 - ※ 단계별 통합 구축 물량은 분석/설계 후 주관기관과 협의(1차 사업 대상은 296종)
-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연계·생산 정보의 수집→구축→품질검사 및 동기화(현행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 단순 저장이 아닌 생성~활용이 실시간 관리되는 관리체계까지 확보
- 운영DBMS의 성능, 장애 관리를 위한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신성 확보가 필요한 데이터의 실시간 변동처리
- 데이터 통합관리체계의 주기적 정합성 검증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 속성 누락, 값체크, 중복여부, 공간정보 표준 등 자체 검사 및 출력 기능

- (지도기반 데이터 서비스) 지도(GIS) 기반에서 각종 위치 및 자료 검색 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데이터를 원클릭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구축
- 이를 위해서, 파일로 보관중인 공간데이터를 포함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관리하는 공간데이터는 GIS DB기반에서 제공/활용하는 아키텍처 구축(DaaS)
 - ※ 정보를 제공받은 공공·민간 등 수요기관에서도 부가적인 재구축·가공 작업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

○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행정 특화 플랫폼 'PaaS' 구축**

☞ **공간정보 PaaS란?** 공간 데이터의 활용/편집/제공 등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유사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 (Geo플랫폼)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유롭게 손쉽게 공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TS, GeoServer 등)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 비전문가도 최소의 비용·시간으로 필요한 공간정보 시스템(서비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용자 공통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현행 정보시스템의 통합·재구축에 필요한 모든 단위 기능을 독립된 모듈로 제공하고, 데이터 통합관리체계의 모든 데이터와 Open-API 만으로도 웹상에서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구축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서비스 'SaaS' 구축**

☞ **공간정보 SaaS란?** 수요조사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관별 공간정보기반 시스템의 중복구축을 예방하고 수집된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응용 서비스

- (경관심의 지원-3D) 도시계획 등 경관심의 업무에 2.5D와 3D 데이터를 활용하는 3차원 정보 지원 서비스 재구축 및 기능 확대
 - ☞ 지도 설정 및 컨트롤, 입체 데이터 모델링, 가상건물 생성, 조망권 및 일조권 분석 등

○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IaaS' 활용

- 現 대전,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분산 관리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을 광주관리원 G-클라우드로 단계적 통합

□ 기대효과

○ 대국민 서비스 측면

-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융복합 정보, 데이터 시계열 관리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 대용량 처리기반의 서버/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지역별, 시기별 특정시점(연초 연말정산 시즌 등)에 사용량 급증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소유권 관리 등에 활용중인 '스마트 국토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한 콘텐츠들의 Real Time 서비스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 통합된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확보와 높은 보안수준을 담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안심 서비스 기대

○ 관련 산업분야 등 기업환경 측면

- 정보에 대한 정보(메타데이터)가 One-Set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데이터 활용기업이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 및 접근성 강화로 산업활성화 기대
- 인프라·데이터·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하는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로, 수요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형태의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정부의 공유·활용 측면

-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유·활용 서비스 가능

-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여 대용량 시계열 정보 및 복잡한 공간분석 기법 활용 등 가능
-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의 통합·개선을 통해 분산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공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개방·융합 기반 마련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 용역비	S/W 개발비 등	8,435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DBMS 등	255
	하드웨어 구매	Web, Was, MAP, DB 서버 등	956
	소 계		1,211
감리비		376	
합 계		10,022	

□ 기타 고려사항

- GIS 및 DBMS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개발·활용 플랫폼 (GeoPaaS)를 구축하는 사업
- 현행 Was서버 기반 서비스(.war) 개발 방식을 벗어나, 클라우드 환경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SaaS)로 구축되어어 함
- NS센터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2,060종)를 분석하여 재가공·부가작업 없이 공간데이터를 즉시 활용하는 서비스(DaaS)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T/F 이영규 주무관(02-2110-6502, anarki007@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구축·운영되고 있는 콜센터 시스템을 표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공동활용)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상담시스템을 구축, 예산절감 및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극대화
- 총 사업기간 : '20년 ~ '22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6개월 ※ 발주예정시기 : 2월
- 예산('20년) : 847백만원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콜110T/F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 업무담당자 등
- 서비스 내용
 - (국민) 원스톱 상담, 상담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 빈발·단순분야 자동상담서비스 등
 - (기관) 인프라 구축 예산절감, 상담지식 실시간 자동제공, 빈발·단순분야 자동답변서비스 등

□ 현황 및 문제점

- 콜센터 시스템의 통합(공동활용) 활성화
 - 각 기관별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개별 구축·운영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장비도입 및 교체·유지보수·통신회선 사용료 등)와 보안 사고·개인정보 유출(콜센터별 보안시스템 수준 상이) 발생이 가능한 문제가 상존

- 콜센터 상담지식DB 통합 및 표준화로 정부콜센터 간 연계강화
 - 각 기관 콜센터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상담지식DB를 별도 구축
 - 운영하고 있고, 구축 시 준수해야 할 표준화된 DB 구조도 없어 통합·연계 활용이 매우 어려움
 - 또한, 기관 업무시스템 등의 중요 시스템과의 연계도 부족하여 상담사가 확보할 수 있는 상담지식에 한계가 있어, 민원인에게 응대할 수 있는 상담 범위가 제한적
- 민원상담 만족도가 상담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 발생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상담사는 요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하나, 광범위한 질의에 대해 모든 상담사가 동일한 수준으로 상담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에, 동일한 콜센터의 동일분야 상담사들 간에도 능력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응대능력 수준과 만족도의 편차가 큰 문제가 상존
- 상담사의 업무강도·스트레스 및 민원인 대기시간 상승
 - 상담사들은 빈발·단순분야·집중문의 등 단순 반복적 상담과 악·강성(성희롱 및 욕설 등) 민원에 업무강도·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고,
 - 민원인 역시 상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보다 상담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 발생

□ 사업 내용

- 정부기관 콜센터 현황 파악 및 업무재설계
 - 정부기관 콜센터 인프라 및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 각 기관별 콜센터 업무를 통합·최적화한 표준 업무프로세스 마련
-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인프라 설계
 - 검증된 G클라우드 구축 기술을 이용한 정부콜센터 공동활용 표준 인프라를 구축하여 콜센터의 핵심기능(PBX, CTI, IVR, WEB, WAS, DBMS, REC 등)을 통합하기 위한 설계
 - ※ 다양한 기관 콜센터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aaS, PaaS, SaaS 등의 방식으로 시스템 통합

○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담지식저장소 설계

- 각 기관 콜센터의 상담 지식DB, 연계기관 상담정보, 공공·행정정보, 기관 업무시스템 등을 총 망라한 통합 상담지식 저장소를 설계
 - ※ 각종 연계·수집된 상담정보와 실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상담분류 최적화 → 상담분류별 최적의 상담지식DB 자동생성 → 실시간 상담 응대자료로 활용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상담도움시스템 설계

- 인공지능(음성인식·빅데이터·구문·의미분석 등) 학습체계를 구축·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지식DB(답변자료)를 상담사에게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 설계
 - ※ 민원인 음성인식 → 음성분석(상담키워드 도출) → 상담지식DB(추천 답변자료) 실시간 검색·제공 → 상담종결(상담내용 자동제공/후처리 시간 단축)

○ 자동상담 시스템 설계

- 빈발·단순분야·단기간 집중문의 등 단순 반복적 상담과 악·강성 민원상담에 대해 챗봇·음성봇 등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자동상담 시스템을 설계
 - ※ 행정안전부 민원상담365 플랫폼 활용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챗봇 등을 이용한 자동상담으로 약 6.4억원 절감 예상(110기준)

온라인 상담(채팅, 문자, SNS상담) 230,005건 × '17년도 기준 1콜당 단가(2,786원) = 약 6.4억

- 상담가능 콜량 연 85만콜 증가 예상(110기준)

'17년도 전화상담 콜량(2,842,100건) × 상담시간 감소비율(30%) = 약 85만건

- 범정부 표준 클라우드 인프라로 약 316.86억 절감 예상

구분	개별구축	통합구축
구축비용	3.9억 × 145개 번호 = 565.5억	565.5억 × 48% = 271.44억
유지보수 비용(연간)	565.5억 × 8% = 45.24억	45.24억 × 49.6% = 22.44억
합계	610.74억	293.88억
예산절감 효과	316.86억	

※ 기 통합된 콜센터 제외

○ 정성적 효과

- 각 기관별로 개별 구축·운영되고 있는 118개 기관 156개 번호 콜센터 시스템을 범정부 표준 클라우드로 통합함으로써,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낭비 방지가능
- 통합된 상담DB, 통계, 고객만족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 가능
- 인공지능 상담분석 및 지식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질의를 정확히 분석해 가장 적절한 답변을 상담사에게 제공하여 잘못된 상담 가능성이 낮아져 상담품질 상승효과 가능
- 빈발·단순 민원상담에 대한 자동 상담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및 상담사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로 만족도 향상 가능

□ 기타 고려사항

- '20년 6월 말까지는 '21년 구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출물이 완성되어야 함
- 사업기간 중 콜센터 운영기관 대상 2회 이상의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함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박종훈 사무관(02-3480-2165, jhunp@spo.go.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IT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수사·조사·감독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디지털증거통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간 공동활용 및 체계적 운영을 통해 범국가적인 수사 역량 제고
- 총 사업기간 : '20년 ~ '22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7~8개월 (변동 가능)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9,370백만원
- 주관기관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이종(異種)의 대용량 디지털증거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간 공유하는 서비스
- 사건의 디지털증거 데이터를 인물·행위·시간·위치 중심 등으로 분석하여 가독성이 높은 정보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빠르고 정확한 혐의점 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 대검찰청 자체 개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확대·개선하여 범국가적인 '디지털증거분석용 플랫폼 클라우드' 제공
-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시스템 기능·성능 향상으로 대용량, 이종(異種) 디지털증거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 기능 제공
- 디지털포렌식 R&D 및 도구 관련 지식서비스(KMS) 제공
- 클라우드 기반 IT 자원 관리 및 시스템 확장, 관리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유관기관의 디지털증거 관리 현황]

- 유관기관은 현행 디지털증거 수집, 이송, 분석, 결과보고 등 업무를 수행함
- 디지털증거는 사건기록물에 편철되거나, 일반압수물로 분류·관리되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사건의 초동단계부터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원본동일성, 보관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체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의 부재로 디지털증거능력 상실 가능성 상존함

[검찰의 디지털 수사지원 시스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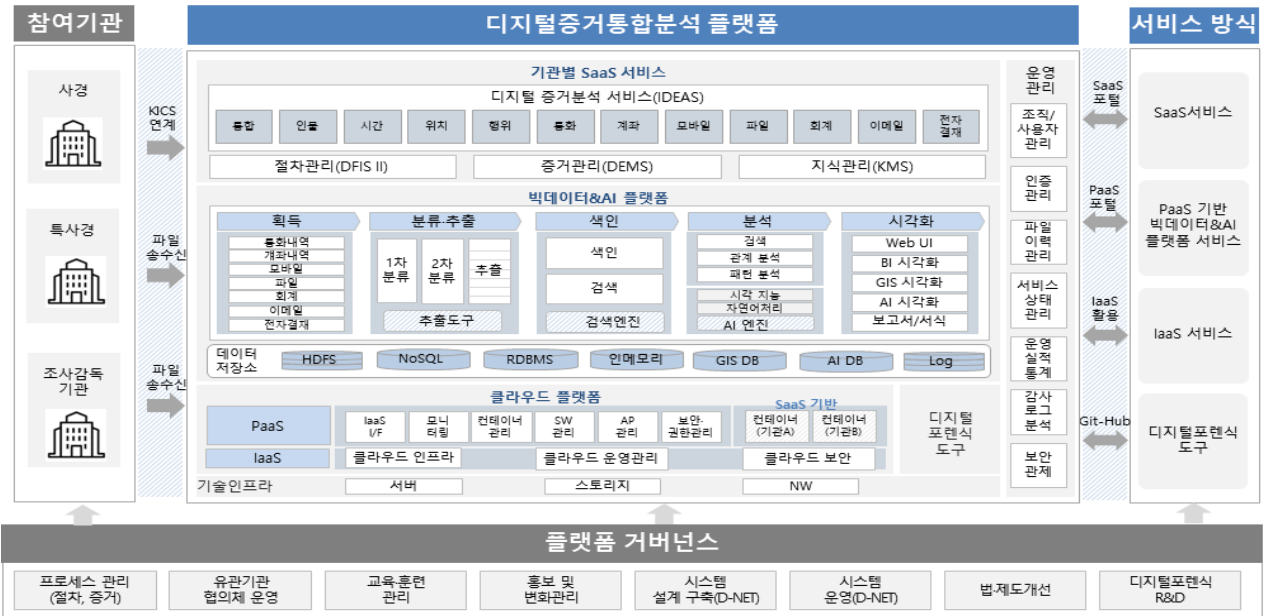
- 검찰은 D-NET, KD-NET을 구축하여 운영 중
 - D-NET : 전국디지털수사망으로 일선 검사실과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간의 디지털수사 증거관리, 지원, 분석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체계
 - KD-NET : 검찰, 경찰, 특사경간의 디지털증거송치 온라인·오프라인 송치 (DEP 활용)를 지원하는 시스템

<주요 문제점>

- 디지털증거가 검찰로 송치 및 수리되고 있으나, 사건기록물에 편철되거나 일반압수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 곤란, 관리 소홀에 따라 증거 훼손 가능성 농후한 실정임
- 특사경은 자체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의 부재로 디지털증거능력 상실 가능성 상존함
- 디지털포렌식 대상 사건의 증가에 따라 대응량, 대량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일부 기관은 외산 디지털증거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나 IDEAS와 같은 복합분석과 교차분석 미흡
- 기관별로 평균 5-6개의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기술표준 및 충족요건 명세화가 부재함
- 일선 경찰의 디지털 증거 송치 시 낮은 전송속도로 증거 전송이 원활하지 않음
- 특사경의 디지털 증거 송치를 위한 DEP 생성 및 전송 흐름은 많은 네트워크 Node 및 망연계 서버를 경유 하여 데이터가 전송됨

□ 사업 내용

[목표 시스템 개념도]



1. 디지털증거통합분석 및 관리를 위한 응용 서비스 개발(SaaS)

- 대검찰청 보유 시스템을 타 수사기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서비스인 SaaS 개발
 -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개발
 - 수사·조사기관용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개발
 - 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 포털시스템 개발

2.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포렌식 증거 데이터(통화내역, 계좌내역, 회계자료, 파일, 모바일, 이메일 등)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의 전처리, 추출, 색인, 검색, 형태소 분석 등 구축
- 데이터저장소(하둡, RDBMS) 및 데이터마트 구축
- 분석 결과의 시각화(BI분석, GIS분석 등)와 보고서 제공

3. 고도의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 증거데이터 기반 자연어 분석, 인물, 행위, 시간, 위치 중심 심층 연관 분석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 머신러닝(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딥러닝(CNN, RNN) 기술을 접목한 패턴 예측 분석 기능 개발

4. 디지털포렌식 KMS 및 R&D플랫폼 구축

- 디지털포렌식 기술정보, 논문정보 등 지식정보 관리 기능
- R&D 결과를 Git-Hub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5. 디지털포렌식 지원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PaaS)
- 디지털증거통합분석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IaaS)
- 클라우드포털, 클라우드 보안 및 인증관리 구축
- 데이터 증가와 트래픽패턴 변화 고려한 NW 환경 구축

□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검찰 내부와 유관기관 관점의 정량적인 기대효과를 편익으로 전환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1,09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산정함

(단위 : 천원)

구분	기대효과	10년간 편익
합계		109,419,121
1. 디지털 증거분석 플랫폼 구축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1-1. SaaS 서비스를 통한 개발 비용 절감	91,050,412
	1-2. 이중입력 제거를 통한 업무처리 시간 단축	266,515
2.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2-1.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 증대	2,534,130
	2-2. AI를 업무에 활용, 업무처리시간 감소	2,164,423
3. 시스템 성능향상을 통한 효율적 증거분석	3-1. 성능 향상을 통한 업무시간 절감	4,328,846
	3-2. 기술 인프라 구축을 업무처리 속도 향상	7,677,851
4. 클라우드를 통한 시스템 확장 및 관리 용이성 제고	4-1. 클라우드를 통한 유지보수 용이성 제고	1,396,944

○ 정성적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디지털증거통합 분석시스템 활용을 통한 수사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증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유관기관은 SaaS 활용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분석 가능 ○ 1차년도에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서비스, 2차년도에 회계, 모바일, 파일, 이메일 등 통합분석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유관기관의 디지털 수사 효율성 증대
철저한 디지털증거 관리 및 절차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증거의 등록에서 폐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철저한 관리 강화 ○ 유관기관들이 수사 및 조사를 위해 송치한 디지털증거물의 진행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및 대응
검찰 수사기법 벤치마킹 및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은 검찰 수사기법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 재정의 및 조직관리에 적용할수 있는 기회 마련 ○ 최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포렌식 기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지식 공유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활용을 위해 신기술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 ○ 이기종, 대용량의 빅데이터 및 AI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증거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전문인력 보강 필요
외산 소프트웨어 사용의 점진적 감소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aS로 제공될 디지털증거통합분석시스템은 국내 디지털 포렌식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사용 기관 확대에 따라 외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연도별 목표시스템 구축 예산

구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등		4,231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1,335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3,505
	소 계		4,840
감리비			299
합 계			9,370

병무청 정보기획과 이용우사무관(042-481-2646) 강병헌주무관(042-481-2685,kangbhun0@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챗봇을 활용한 개인의 병역이행과 관련한 지능형 맞춤상담 및 민원신청을 24시간*365일 제공
- 총 사업기간 : '19년 ~ '20년(2년)
- 사업기간('20년) : 7개월 ※ 발주예정시기 : 2월
- 사업예산('20년) : 1,404백만원
- 주관기관 : 병무청 정보기획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병역이행대상 국민(18세 ~ 35세), 병무청 내부직원 1,800명
- 서비스 내용
 - (국민) 단순상담에 대해 365일*24시간 자동상담 서비스 → 전화 대기 시간 및 포기콜 감소로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 기회 제공
 - (업무처리담당자) 자동상담 정보를 활용 상담오류 최소화와 병역법 및 지침 정보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 현황

- 병무민원상담소는 연간 약120만건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며, 71%가 단순 병역정보 안내에 집중되어 불만·고충 상담에 병역이행 대상자의 불만족 증가(전화상담 대기시간 증가, 포기콜 발생)
 - ※ 평균 대기시간 : 72초, 통화포기 건수 : 연간 199천건(전체 상담 인입량의 18%)
- 최근 모바일 메신저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병무 행정의 주고객인 젊은세대(18세~35세)가 선호하는 친숙한 채팅형 서비스로 전환

□ 사업 내용

○ 지능형 민원상담·신청서비스 고도화

- 서비스 범위 확대 : 상담소 단순상담의 80% → 90% 확대
- 서비스 품질 향상 : 응답성공율¹⁾ 70% → 80% 확대(1차년도 구축 시나리오 포함)
 - 민원인 질의에 대한 챗봇 시나리오 보완
 - 민원인 질의를 분석하여 질의간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분리·통합
 - 민원인 질의의도 재학습, 신규 시나리오 학습 등
- 사용자 질의의도 챗봇 인식률²⁾ : 80% → 90% 확대
 - ※ 인식률은 유사질의 30개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측정
- 대화형 민원신청 종류 확대(12종 추가) : 39종 → 51종
 - ※ 붙임² 민원신청(접수)목록

○ 자동 상담 시나리오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챗봇 미응답 질의와 부적합한 응답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 민원인 질의에 대해 챗봇 미응답 사유 분석하여 대응
 - ※ 미응답 사유 및 대응방안 : 인식률 저조 시나리오 → 재학습,
새로운 민원인 질의 → 신규 시나리오 개발
 - 민원 만족도가 저조한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 체계 구축
 - ※ 챗봇 응답에 대해 민원인 반응을 파악하여 만족도(목시적 만족도) 관리
 - 부적합 답변에 대하여 질의의도 재학습 대상을 선별하고 재학습
- 전화상담 질의내용을 분석하여 신규 상담 시나리오 개발 및 보완
 - 전화상담 내용(민원인과 상담원으로 화자분리)을 실시간으로 문자변환하고 관리체계 구축 ※ 최근 5년간(사업완료일 기준)의 기존 전화상담 내용 변환 포함
 - 민원인 질의(음성)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고, 챗봇에게 제공하여 챗봇 표준응답 정보를 전화상담원에게 제공
 - 챗봇 표준응답에 대해 전화상담원이 검증평가하여 신규 챗봇 시나리오 개발 및 보완 등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1) 성공율 : 사전 정의한 시나리오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응답하는 비율

2) 인식율 : 사전 정의한 질의의도(유형)에 대한 인식률

○ 챗봇 미응답 상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1차 대응 : 민원인 질의를 검색엔진과 연계하여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최적의 정보 제공
 - 1차 사업내용 고도화 : 검색엔진의 색인정보와 챗봇의 지식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의도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응답정보 제공
 - ※ 1차사업의 결과³⁾를 분석(웹사이트 세부 분야별 적중도 분석 등) 활용
 - ⇒ 1차사업(여러개 콘텐츠 제공) → 2차사업(단일 콘텐츠 제공)
 - 검색대상 웹사이트 확대 : 1종 → 5종
 - ⇒ “대표홈페이지” + “민원포털, 공개개방포털, 병역일터, 사회복지포털”
- 2차 대응 : 채팅 및 전화 상담과 연계(상담원 분배 및 챗봇 상담이력 제공)하여 대화(상담)의 연속성 보장
 - 전화상담과 채팅상담 중 대기자가 적은 상담채널로 자동연계하고, 챗봇 상담 이력정보 제공
 - 전화상담 : 콜분배 솔루션(CTI) 연계(전화상담은 기존 운영 시스템 활용)
 - 채팅상담 : 채팅상담 체계 신규 구축(상담원 분배 등), 챗봇 연계

○ 업무(상담) 어시스턴스 고도화

- 병역의무자별 맞춤형 컨설팅 시나리오 구축 : 고객의 병무행정 병역 사항, 입영(모집)일정과 고객의 입영분야 및 자격.면허.전공 등을 확인하여 진행절차(입영일, 모집일정·분야 등) 추천 제공
 - ⇒ 내부직원에게 민원상담용으로 먼저 적용·활용하고 검증된 시나리오는 챗봇에 의해 민원인에게 제공
- 행정착오·오류예방을 위한 어시스턴스 기능 제공 : 오류 점검 프로그램 실행 및 결과 담당자 알림 기능
 - ⇒ 챗봇을 활용한 업무처리 기반 마련

3) 1차사업('19년) 내용 : 챗봇 미응답시 병무청 대표 웹사이트에서 민원인 질의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제공

○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T자원 증설

- SW / HW 도입

□ 기대효과

- 국민의 전화비용, 상담과 민원신청 연계에 따른 비용 절감
- 병무청의 문자상담 발송비용 절감 등을 비용으로 환산시 연간 약3억2백만원 절감 예상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DB 구축비 등	1,053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검색엔진 등	122
	하드웨어 구매	서버 등	127
	소 계		249
감리비		102	
합 계		1,404	

□ 기타 고려사항

- 본 사업은 19년도 1차사업의 연속되는 사업으로 구축사업자는 1차사업의 모든 기능을 유지(WinBack 가능)하고 2차사업 수행
- 본 사업은 S/W개발이 아닌 패키지로 대체할 경우 각 패키지의 비중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위협 대응과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빅데이터기반 정보보호 체계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여 예측·예방 활동 및 분석 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 총 사업기간 : '18년 ~ '20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8개월 ※ 발주예정시기 : 3월
- 예산('20년) : 5,496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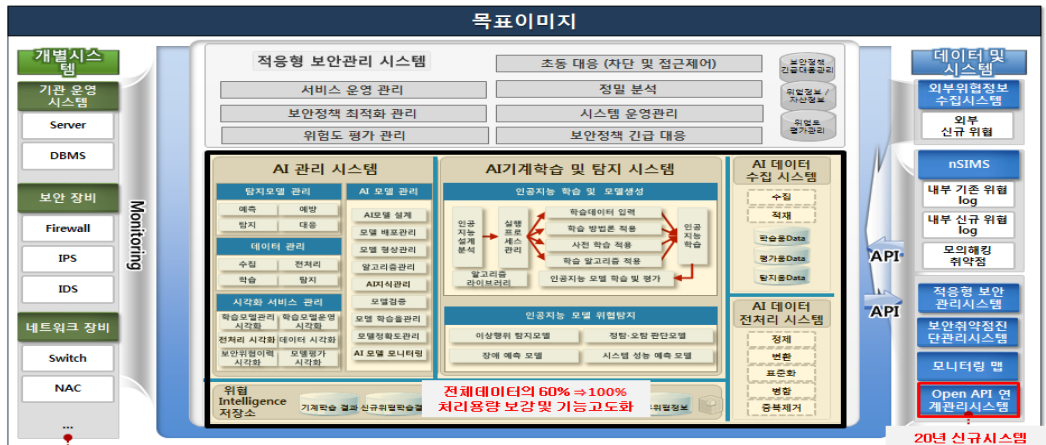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중앙행정기관 등 1,500여개 전자정부서비스 및 서비스이용자
- 서비스 내용
 - (국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응 서비스로 외부의 해킹 시도로부터 정부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각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업무처리담당자) 사이버 공격대응속도 향상 및 범위확대, 알려지지 않은 공격대응능력 확보 등 보안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안정성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정부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이를 대상으로하는 사이버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으나 인력 및 시간제약에 따라 대응한계 발생
- 신종공격기법의 발전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공격 대응능력 확보 필요

□ 사업 내용



-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용량 증설 및 추가 기능 구현)
 - AI 데이터 수집, 전처리, 기계학습 및 탐지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
 - 데이터 처리용량 확대: 인공지능 시스템 처리데이터의 60%에서 100%
 - ※ '18년 4.8TB 용량증설(30%), '19년 5.8TB 용량증설(60%), '20년 9.4TB 용량증설(100%)로 단계적 확대 진행(관리원에서 발생하는 40TB/day의 데이터 중 20TB이상 인공지능 처리대상)
 - 적응형 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실시간 자동차단 등 보안관리 기능 강화
- 서비스 모델 2차 고도화(적용범위 확대 및 정확도 향상)
 - 학습에 의한 탐지모델 개선, 학습 성능 및 범위 확대(각 30% ⇒ 각 80%확대)
 - ① 보안시스템 및 SIEM에서 발생하는 보안이벤트의 정·오탐 자동식별
 - ② 전자정부서비스의 정상이용기록 기반 비정상행위 식별모델
 - ※ 각각의 개발모델에 대한 처리우선순위 지정 등 후처리모델 포함
- 모니터링 맵 시스템 고도화(용량 증설, 기능개선 및 범위확대)
 - 관리원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자산정보, 로그정보, 구성 정보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구성 및 영향도 파악
 - 전자정부서비스 898개 ⇒ 전체서비스(1,481개)로 적용범위 확대
- Open API 연계시스템 구축(신규)
 - 외부위협정보 수집 및 연계에서 End-system에 자동정책 적용 등을 위해 활용되며 향후 외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 적용
- 외부위협수집정보 수집시스템 서비스 개선(수집 및 질의 튜닝)
 - 글로벌 및 국내 위협정보 실시간 수집 및 위협정보 질의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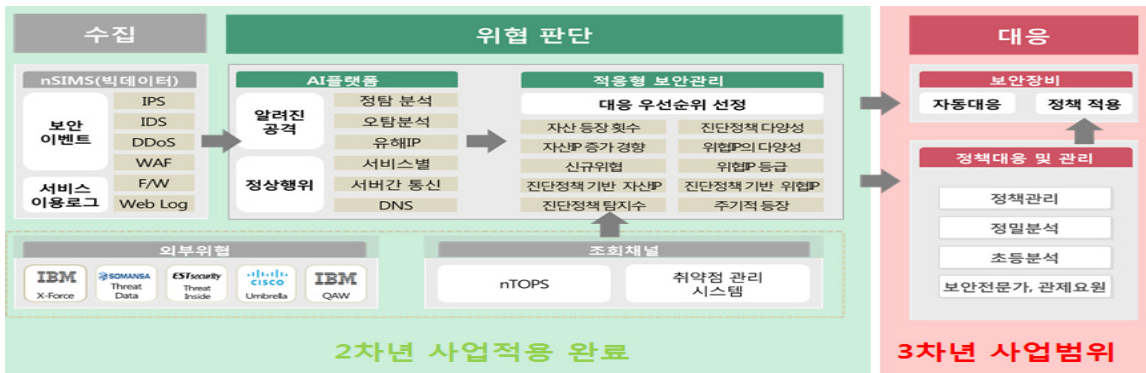
- 전자정부 정보보호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후 보안이벤트의 자동식별 및 대응 적용 시 처리범위는 전체이벤트의 80% 확대, 처리속도는 건당 30초이내로 단축
 - 기존 보안인력을 신규 위협분석,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 정교화 분석 등 고급업무 전환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인력 개개인의 고급화
- 공격패턴 중심의 대응체계(오용탐지)에서 정상행위 기반의 비정상행위 식별(이상탐지)체계 구현, 신규위협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나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학습모델 확대 등	3,218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외부위협정보 수집 등	340
	하드웨어 구매	서버 등	1,743
	소 계		5,301
감리비		195	
합 계		5,496	

□ 기타 고려사항

- AI기반 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적응형 보안관리시스템 및 외부위협정보 수집시스템 등 기반시스템의 제반기능 고도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서기관(044-205-2469, nettouch@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유통하여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필요
- 총 사업기간 : '19년 ~ '21년 (3년)
- '20년 사업기간 : 7개월 ※ 발주예정시기 : 2월
- 예산('20년) : 10,346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일반국민,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이용기관(지자체, 은행 등)
- 서비스 내용
 - (개인/사업자) 증명서 제출(국민→행정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지갑(멀티앱)을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신청), 재발급, 제출, 기관수취 행위가 1회로 완결
 - (민간 금융기관 등) 문서 유통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 및 기관 업무처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문서 열람·보관 등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정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완결된 온라인 민원서비스 구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로 실시간 민원처리 및 정보공유 활성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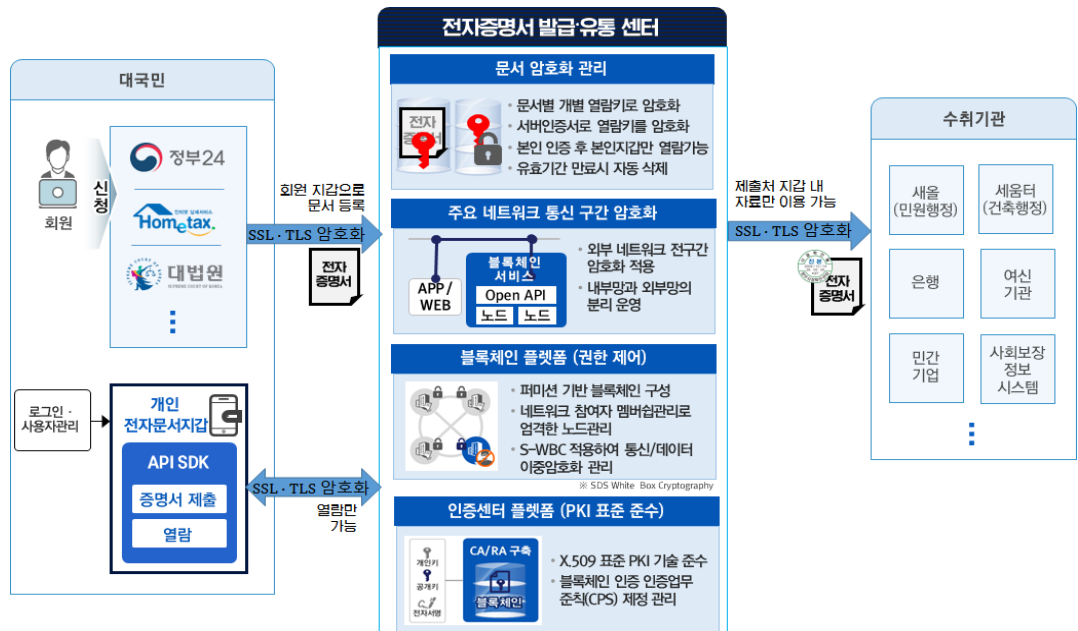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2019년 1차 사업)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24 즉시발급 민원 13종 서비스 개시

구분	연계정보	소관 부처 및 기관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행정안전부/자치단체
2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교통부/자치단체
3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경찰청
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교통부
5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교육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행정안전부/자치단체
7	병적증명서	병무청
8	예방접종증명	보건복지부
9	출입국 사실증명	법무부
10	지방세 납세 증명	행정안전부/자치단체
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개념도



- 전자증명서가 유통되는 모든 구간은 암호화기술(문서암호화, 구간 암호화, 블록체인 권한제어, PKI표준 준수)과 최신인증기술(사설인증 체계, HSM 등)이 적용되어, 비인가자의 수신, 접속, 문서 저장행위 원천 차단

□ 사업 내용

① 전자증명서 포털서비스 구축

- 사용자가 선택한 타기관App(금융기관 등)을 사용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재발급, 조회·열람, 제출기능 제공
- 정부LDAP연계 및 전자문서지갑 디렉토리 관리 기능 구현 대규모 사용자 관리체계 개선,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② 전자문서지갑(e-문서지갑) 기능 추가 및 개선

- 사용자가 선택한 타기관의 앱을 통하여 자유로운 발급(신청)·재발급(재신청) 서비스(화면설계, 정보시스템 연계, 데이터·증명서 프로세스 관리) 구축
- 발급(신청)·재발급(재신청) 시 수수료 발생 증명서를 대상으로 결제모듈 연계

③ 전자증명서 유통운영자 서비스 구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계 기능 개선 및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현
- 발급수수료가 부과되는 전자증명서에 대해 기관별, 유형별 수수료 정산 관리하는 통합 결제정보 관리체계 구현

④ 정보 및 서비스 연계체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한 신규 증명서 종수 확대 및 수취·발급 기관 연계지원체계 구현
- 정부24(55종), 국세청(16종), 국민건강보험공단(11종), 인사혁신처(4종), 공무원연금관리공단(1종) 등 87종 연계 확대
- 국공립대학교(5개 희망대학, 3종) 전자증명서 민간유통서비스 시범 연계

⑤ 블록체인 기반 진본성 검증체계 구축

- 발급기관 4개 추가에 따라 블록체인 연동 구현
- 신규 발급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수취 또는 지갑 API의 암호·복호화 기능 개발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보안성 강화

⑥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인프라 구성

-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반 인프라(HW, SW, NW)에 도입
- '19년 시범서비스에 적용된 인프라 및 솔루션 운영환경의 서비스 이중화

□ 기대효과

-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발급하여 구비서류 신청·발급을 위한 민원인 편의제공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종이 증명서 발급 감축으로 행정·공공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온라인 민원완결 서비스 제공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등		6,608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WEB, WAS 등	2,992
	하드웨어 구매	서버, 스위치 등	746
	소 계		3,738
합 계			10,34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권순길 사무관(044-201-3479, ksg000@korea.kr)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탑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체계 개선 및 전략 수립
 - 부동산 거래·산업에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 정보 및 거래정보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기반으로 참여자(민간·공공기관 등)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종이문서 유통 감축
- 총 사업기간 : '20년 ~ '23년(4년)
- '20년 사업기간 : 8개월 ※ 발주예정시기 : 2~3월
- 예산('20년) : 808백만원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부동산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이용기관* 업무담당자 등
 - * 관공서, 법원(등기소), 금융결제원(은행)
- 서비스 내용
 - (국민) 부동산 거래 시 전자문서 제공 서비스 이용으로 번거로운 기관 방문(은행, 등기소 등) 없이 종이문서(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제출 최소화로 대국민 편의성 증진
 - (이상거래 탐지) 부동산 거래정보를 추적하여 단절된 흐름을 파악하고, 허위매물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원스탑 거래)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부동산 정보 및 거래정보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기술을 도입하여 계약부터 대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 부동산 공부 변경까지 원클릭 부동산 거래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부동산 거래 시 물건 확인에 필요한 공적장부를 종이로 발급 받아 관계기관(은행, 등기소 등)에 제출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 발생
 - 재산권과 직결되는 공적장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거래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및 국민피해 위험에 노출
 - 현재 다양한 부동산 민간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공적장부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유가 어려워 활용성 저하
- * 관련 민간 플랫폼 : 다방, 직방, 부동산114 등
- 부동산 공적장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단절된 업무체계로 이를 통합하여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

□ 사업 내용

-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공동이용 및 원스탑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 전략(BPR/ISP) 수립

- **블록체인 관련 국가 정책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 등**
 - 국내·외 블록체인 플랫폼 현황 조사(서비스 속도, 개발언어, 예상사용량, 전자파일 인증 등)를 통한 기술성숙도 및 해외 사례 분석
-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업무재설계·서비스 모델 발굴**
 - **현행 부동산 공적장부의 연계·공유 현황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연계·공유하는 방안 마련**
 - 부동산 거래정보를 단계별로 추적하여 단절된 흐름을 파악하고, 허위매물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분석을 위한 체계 마련
 - 현행 부동산 거래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단절된 부동산 거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탑 부동산 거래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정보화 전략 수립
-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정보공유·거래체계 구축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인프라 구축·시스템 설계 방안 마련**
 - 부동산공적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들과 연계방안 마련
 -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부동산 거래 정보를 연계·공유(민간플랫폼·은행 등)하는 방안 마련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탑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 방안 마련
- **단계별 구축 및 상세 이행계획 수립**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안, 참여기관의 역할 정의 등 상세 이행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paperless) 부동산 거래시 사용되는 종이증명서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은행대출, 등기변경 등의 업무 효율화
- (stability) 투명한 부동산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거래(이중계약 등 방지)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비용 감소
- (one-stop)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부동산 원스탑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대출, 등기 업무 등의 자동화

□ 예산 현황 및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개발용역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730
감리비		78
합 계		808

□ 기타 고려사항

- 부동산 관련 시스템*간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부동산거래 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참여 협의체 운영 예정

* 계약(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대출(금융결제원, 은행), 등기(대법원, 전자법무플랫폼) 등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filling the majority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filling the majority of the page.

